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다



이재용 구속 이후
퇴진 운동의 과제

3, 5면

퇴진 운동을
계기로 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4~5면

김정남
파살이 드러낸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6~7면

구조조정에 맞서는
현대중공업 파업

12면

이재명은
한국판 “샌더스”?

8면

국제
미국의
반트럼프 운동,
프랑스 흑인 소요

2, 9면

광고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여성해방 하루 학교

7면

미국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대중 저항

알리스터 패로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공격에 맞선 저항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

2월 13일 위스콘신 주(州) 밀워키에서는 족히 1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 이 행진은 ‘라티노, 난민, 이주민이 일하지 않는 날’의 일환이었다.

노동자 수백 수천 명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출근하지 않아 기업체 1백 50곳 이상이 이날 문을 닫았다.

2월 둘째 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직원들은 적어도 11개 주(州)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 이주민 7백 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 단속은 지난달 트럼프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으로 강제 추방 대상 이주민의 범위를 넓힌 뒤 취해진 일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판단할 때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보를 해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강제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즉, 미등록 이주민 1천1백만 명이 강제 추방될 위협에 놓이는 것이다.

이주민 방어 운동 단체 ‘길을 열여라’의 활동가 데버러 악스트는 2월 10일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이 규정은 생존을 위해, 자기 아이들을 먹이려고, 폭력과 박해를 피하려고 이 나라에 온 거의 모두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이주민 단속은 트럼프가 공격을 한층 더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강제 추방이 계속 증가해 온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민 단속은 미국 전역에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롤리에서는 해마다 시민평등권 행진을 벌이는데, 2월 11일에 열린 올해 행진에는 트럼프의 공격에 성난 사람들 8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앨러배마 등 도시 수십 곳



트럼프에 맞서 일어나는 미국의 대중 운동이 심상치 않다 위스콘신 주(州) 밀워키 반트럼프 행진.

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에릭 프릿츠는 이렇게 말했다. “2월 11일 여러 곳에서 많은 집회가 열렸고,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시위대 약 5백 명은 행진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워싱턴스퀘어파크에서 출발해 경찰의 저지를 피해 웨스트빌리지 골목을 누비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전국에서 경찰은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막으려 애썼다.

2월 17일 금요일로 계획된 전국 ‘파업’의 중심에는 이주민 연대 단체들이 있다. 17일 파업의 조직자 중 한 명인 토드 월프슨은 ‘이주민이 일하지 않는 메이데이’도 조직하고 있다.

‘보호 대학’(미등록 이주민 학생을 보

호하는 정책을 채택한 대학)을 위한 운동이 조직 노동자, 이주민 권리 방어 단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여러 전선에서 노동계급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州)에서 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 제시카 트로이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벤티 디보스뿐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하는 일 전체에 대해서 말이죠.” 대학생들은 이주노동자 연대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버크넬대학교의 마이클 드렉슬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버크넬 학생들의 항의 운동 단체 ‘버크넬 대안 대표단’이 2월 17일 ‘파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가 공격을 준비 중인 트럼프

트럼프 정부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월 12일 백악관 선임정책고문 스티븐 밀러는 정부의 무슬림 입국 금지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개 시애틀 지방 법원 판사가 그들 개인의 관점을 이유로 미국 대통령에게 법률과 우리의 헌법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그 때문에 입국이 막혔던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연대 집회와 파업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판사들을 움

직이게 만들었다.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학교 학생 한 명이 입국 금지 조치에 막혀 들어오고 있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11일에 입국했어요.”

곧 다음 공격이 있을 것이고, 운동은 이에 저항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2월 12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나라 안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매우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주 중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낙태권 공격도 저항에 부딪히다

미국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엘리너 클렉스턴-메이어가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반격도 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세계적 금지 명령’을 부활시켰다. 이는 해외에서 낙태 관련 정보 제공 활동을 벌이는 자선단체에 지원금을 끊는 조치이다.

트럼프가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날 고서치는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생명은 근본적이고 선천적으로 귀중한 것이다.” 그는 아직 낙태 사건에 관련한 판결을 내린 적은 없다.

트럼프는 낙태 합법화의 상징인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라고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낙태가 제약당한다.

[트럼프 취임 다음날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참가한 여성행진이 크게 일어난 것을 본 미국인들은 낙태권을 방어할 자신감이 커졌다.

여성행진 조직자들은 파업을 벌이려고 제안했는데,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이 날 사람들의 의지가 우뚝 설 것이다.”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어떤 활동가들은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에 파업을 벌이자고 호소했고, 이미 조직이 시작됐다. 뉴욕 해밀턴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알렉산드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 고향 텍사스 주(州)에서 여성들의 재생산권은 계속 공격당하고 있어요.”

텍사스에서 여성들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면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 태아의 모습과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는지를 의사한테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렉산드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 주(州)에 있는 낙태 시술 병원의 다수가 문을 닫아 텍사스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가 크게 힘들어졌어요. 재생산권을 방어하는 연대운동의 물결이 전국에서 일고 있어요.”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1월에 극성스런 낙태권 반대론자들이 해마다 벌이는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가해 연설했다. “이 정부는 하원과 협력해 낙태 시술에 납세자들의 돈이 쓰이는 것을 끝내겠습니다.” 인디애나 주지사였을 때 펜스는 낙태를 범죄화하는 법을 승인한 적이 있다.

그 법 때문에 푸르비 파텔은 자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에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파텔은 1년 뒤 한 판사가 판결을 뒤집어 석방됐다.

펜스는 하원의원일 때는 가족 계획 협회에 지원금을 완전히 끊자는 데 계속해서 찬성 투표를 했다. 가족 계획 협회는 낙태 시술을 포함해 재생산 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미국에서는 이미 JFK국제공항 택시 노동자들과 뉴욕 주(州) 브루클린의 예멘 출신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 바 있다.

‘여성이 일하지 않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파업이 호소되고 있다. ‘여성이 일하지 않는 날’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격과 트럼프에 항의하는 뜻으로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무급 노동과 가사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알고 보기

- ★ 1973년 이전 미국에서는 해마다 여성 1백20만 명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을 받았다.
- ★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해마다 5천 명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 ★ 2016년 미국인의 57퍼센트는 “모든 경우나 대부분의 경우에”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성행진은 세계 곳곳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행동과 파업을 건설할 수 있고, 이는 다시 트럼프의 공격을 물리칠 운동의 바탕이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541호 / 번역 차승일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김문성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 총수 이재용 구속 소식이 전해진 아침,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종범아 호석아 야~ 오늘 너무 기쁘다.^^”

최종범·염호석 열사는 삼성의 악랄한 무노조 경영에 투쟁으로 맞서다 한을 품고 자결한 청년 노동자들이다. 염호석 열사의 경유엔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우리는 수십 명이 죽어 나간 반도체 노동자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지회장의 말대로, 악랄한 노동자 통제에 맞서 싸우다가 또는 죽어 가는 지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희생된 삼성 그룹 노동자들에게 이재용 구속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지금도 투쟁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을 작은 정의의 실현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과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은 서로 대가성이 없으며 뇌물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박근혜가 체계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돕고 삼성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권 실세들과 유착해 왔음을 밝혀 낸 듯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관제 데모에 동원되는 우익 단체들을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은 안팎에서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서 일류로 활약해 온 것이다.

이제 이재용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던 박근혜가 뒤에서 재벌의 더러운 돈을 받아 왔음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이다. 독신이라 부패에서 자유롭다던 박근혜는 최순실, 삼성 가문과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와 박근혜를 비호한 권력층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진 운동에 바치는 찬사다.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백만 대중은 단지 박근혜 일당의 부패라는 특정한 사건에만 분노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권력형 부패가 상징하는 불평등한 특권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

또한 이재용 구속은 퇴진 운동이 현

정국의 중요한 변수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기자회견을 방자한 박근혜의 범죄 은닉 교시 방송을 시작으로 우익의 총반격이 벌어져 왔다. 여기에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우익 관제 데모, 정권이 장악한 방송들의 꾸준한 왜곡 보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MBC는 최근에도 박근혜 게이트를 고영태 게이트로 둔갑시켰다. 불법 노조 탄압 등에 관한 MBC 대상 국회 청문회를 비판하는 데 뉴스 타임을 할애했다.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사유화한 작태다. 심지어 이런 오만방자한 경영진에 항의하기 위한 노조의 투표도 폭력으로 가로막았다.

반격

그러나 설 연휴 이후 퇴진 운동은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했다. 1월 중순 10만 명가량으로 줄었던 주말 집회 규모가 신속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결국 올해 집회 중 최고 정점을 찍은 바로 다음주에 이재용이 구속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2월 24일에 종결하고 사실상 선고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쌍용차 파업 강경 진압 책임자인 전 경찰청장 조현오가 16일 뇌물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노조 탄압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은 이재용이 구속된 17일 오전 법정구속됐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모두 광장의 지지를 받았다. 작지만 이 정의로운 판결들도 대중 운동의 효과다.

최근 고전하던 특검이 이번 주에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황교안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서를 보낸 것도 퇴진 운동의 반격이 강력히 재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퇴진 운동이 전진해 왔다는 것은 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정 국사교과서를 채택하려 한 구미 오상고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항의로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각자 노트와 도화지 등에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효과를 낸 듯하다. 더구나 박정희의 고향이라는 구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월 11일 80만 시위가 이재용 구속의 한 계기였다.

우익의 반격에 더 확실하게 맞불을 놔야 한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들의 반격 몸부림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여전히 몰두해 있다. 가짜 뉴스 등을 이용한 집회 동원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앞은 물론이고 이재용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출석한 법원 앞 등 세력균형이 시험되는 장소마다 가서 시위를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 심지어 교장이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종업식 연설을 해 재학생들이 반발한 서울 용산 디지털고교 앞까지 몰려갔다.

현재 탄핵 심리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는 현재 법정에서 갑자기 태극기를 꺼내어 흔드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우익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정보원을 등에 업고 노동운동과 반(反)보수층 상당수를 ‘반대세’(반대한민국 세력의 줄임말)로 칭하며 ‘애국 세력 집결’ 담론을 유포해 왔다.

이는 (박근혜가 당선한) 대선 of 총체적 국가기관 개입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우익들의 이런 공작정치 행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기 투쟁과도 연결돼 왔다.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보듯 이런 우익적 작태들의 배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었던 것이다.

특검 연장

그러므로 주류 언론들이 ‘촛불 vs 태극기’ 식으로 촛불운동을 마치 반국가적인 양 보도하는 행태는 파렴치한 여론 조작에 불과하다. 그 일부가 지배계급 내 갈등의 맥락에서 한때 박근혜 폭로에 열을 올리기도 했으나, 우익이 판치는 세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는 조금치도 변함 없는 것이다.

우익의 이런 끈질긴 반격 시도는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을 놓고 좌우 대결이 (뺑뺑하게) 벌어지는 듯이 프레임을 조작

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보수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퇴진 운동의 저변을 좁히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을 압박하려 한다. 성공한다면 이를 통해 세력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우익은 3월 1일 “1백만”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올게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월 1일 대규모 공식 맞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체 모를 돈에 의존하는 우익 관제 데모 세력이 결코 1천5백만 퇴진 운동과 대등한 세력이 아님을 보여 주겠다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2월 25일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3월에도 비상한 각오로 거리 투쟁을 확대하고 유지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하루 파업을 포함해 총력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개악 저지, 인력 구조조정 중단, 고통전가 정책 반대 등 스스로의 요구도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구속'.

황교안에게도 항의하자

16일 오전 법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응낙 통보한 것을 효력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 자격이 없고 효력정지의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 법리만 따진 듯하다. 특검도 압수수색 불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고 소송 방식을 취한 듯하다.

특검과 법원의 책임 떠넘기기는 결국 박근혜의 수사 방해와 거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이 뇌물죄로 구속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의 정당성을 더 높일 것이다.

따라서 특검 연장 요구를 황교안에 대한 항의와 연결시켜야 한다. 특검 연장 권한을 쥔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적폐의 공범이자 수행

자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황교안·우병우의 단죄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국회의 특검법 개정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 황교안이 우익 부활의 아이콘이 아니라 박근혜와 함께 추락하는 공범의 아이콘이 되게 해야 한다.

▶ 5면으로 이어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도 노동계급이 주요 동력이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최일봉

지난해 10월 말 이래 지속돼 온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민주주의 투쟁이다. 정치적 부패와 부당함에 항의하고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는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한다. 무엇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적 특권에 대한 분노와 평등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사회주의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전통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다.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적 권리와 인권, 부패에 대한 항의가 투쟁의 동력이 됐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동자 조직 자체를 봐도 정부나 사용자 단체, 우익 단체보다 훨씬 민주적이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민주주의를 철저히 결여하고 있다. 기업주와 정부 관료, 판사 등은 선출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선출되지만, 대부분 선출되자마자 공약을 어기기 시작한다.

선의를 가진 개혁파 국회의원도 정부와 기업의 권력에 부딪혀 좌절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초심을 잃고 변질해 버린다.

사실, 의회는 점점 더 무책임해지고, 대표성도 더 떨어지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하에서도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된 빈곤과 불평등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환멸도 크다.

커다란 불평등은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다. 부(富)의 압도적인 부분에 1퍼센트도 채 안 되는 극소수의 수중에 집중돼 있는 사회는 민주적일 수 없다. 그런 격차는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처럼 일반적인 민주주의에 관해 말할 수 없다. 선

진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할까?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구분해야 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전자는 지지하지 않지만 후자는 지지해야 한다. 민주적 권리들을 활용하면 노동계급 운동이 제약을 더 적게 받고, 정치적 성과를 지킬 수 있다.

또한 민주적 권리들의 실상을 드러내어 국민주권 이념과 자본가 계급의 국가라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부각시킬 수 있다. 국민주권 이념은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국민은 그저 선거 때만 주권자이고, 선거가 끝나면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감시·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해(서구 수준으로 진보케 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주의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급진좌파들도 근본적 사회 변혁에 앞서서 ‘민주 변혁의 완수’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전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은 그들 사이에 서로 다르다(시민사회론, 스탈린주의, 유러코뮤니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등등). 그러나 민주 개혁들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면 결국 국가 기구들의 성격이 변해 마침내 진보진영 쪽으로 넘어온다는 가정은 비슷하다.

이 가정에 따르면, 국가 기구를 내부로부터 변모시키거나 그 기관장들을 개혁가로 교체해야 하고, 대중 투쟁은 이 목적에 종속돼야 한다. 결국 ‘국가

의 민주화’가 국가의 분쇄를 대신한다.

그러나 국가의 점진적·평화적·합법적 변혁이나 국가 기관장의 좌파전은 죄다 환상이다. 국가의 민주화는 노동자 평의회로 조직된 노동자 국가에 서만 가능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민주적 권리를 방어해야 하지만,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부가 극소수 자본가들 손에 남아 있는 한은 불평등과 착취, 차별도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다.

생산수단의 공유가 없으면 빈부격차는 물론 노동계급 내 격차도 남아 있게 된다. 노동계급 내 불평등은 여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온상이 된다.

또한 극소수인 자본가들이 계속 사회의 부를 지배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등지에서 나치가 집권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하에서 진보당과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합법성을 잃은 일도 이를 힘껏 보여 준다.



극소수의 자본가가 부를 지배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안전하지 못하다.

혁명이 실패했거나 위험한 고비에 처할 때마다 우익 군장성이나 파시스트들이 민주적 권리를 짓밟고 혁명가들과 전투적 노동자들을 학살한 사례가 많다.

민주적 권리들도 노동자 민주주의(노동계급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국가 형태) 하에서 비로소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참가해 얻어야 할 소득

마르크스주의자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민주주의 투쟁을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의 힘 강화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현재 득세하고 있는 흐름은 민주당과 그 대선 예비후보들의 강화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다. 대선이 사실상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으므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한 듯하지만, 설사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선

거만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믿는 개혁주의자들에게는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하나를 미는 게 ‘현실적’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반면 혁명가들에게는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의 힘과 조직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마치 탄핵과 즉각 퇴진의 관계처럼, 대선 승리와 노동자 투쟁 및 조직 강화도 개혁과 혁명의 관계다. 혁명가는 개혁을 위한 투쟁을 일축하지 않는다. 동시에, 혁명가는 개혁을 위한 투쟁을 혁명을 위한 투쟁에 종속시킨다.

문제는 중요한 노동자 투쟁이 지금 가까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말과 11월에 철도 파업이 가까이 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노동계급 선진 부분의 정서를 봐도 산업 행동에 즉각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듯하지 않다.

이런 때 상기해야 할 점은 노동계급의 투쟁이 반드시 경제적·정치적 형태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형태도 취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자 투쟁이 반드시 경제적 투쟁으로 시작돼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선도적 구실을 할 수 있다. 십중팔구 두 달 가량밖에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주력해야 할 일은 이데올로기 투쟁이다. 대선 과정에서 제기돼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 속에서 뜨거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쟁점들에 관해 언급해야 한다.

이데올로기 투쟁을 중시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정치적 투쟁과 경제적 투쟁을 도외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데올로기 투쟁을 이런 실제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 가령 버니 샌더스는 지난해 4월 중순경 파업 중인 CWA(Communication Workers of



촛불운동으로 발전한 조직과 의식을 밀거름 삼아 향후 노동자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America) 미국통신노조 노동자들을 지지차 방문했는데, <노동자 연대> 신문은 바로 이 같은 연관을 이뤄 내야 한다.

대선 전망이 확실한 건 아니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재인이 언제까지 지금의 인기를 누릴지가 확실치 않다는 뜻이다. 1990년 봄 영국에서 격렬한 주민세 반대 폭동들이 일어나 당시 총리 마거릿 대처가 11월에 실각했을 때 대다수 영국인들은 1년만 뒤 치를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고 노동당이 승리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보수당은 5년이나 더 집권했다. 시리자도 예상보다 2년 반쯤 늦게 집권했고, 포데모스도 지지난해 집권 예상이 빗나갔다. 물론 한국인 다수의 반여권 정서는 지금 매우 강하다. 하지만 노무현에 대한 배신감과 씁쓸함도 적지 않다.

게다가 선거에서는 의식이 선진적인 사람들 뿐 아니라 매우 후진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거에서 우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덜 확실해질 것이다. 그래서 표 차이가 적을 것으로도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진보 독자후보가 나온다면 진보·좌파 진영 내부의 이견과 갈등이 날카로울 것 같다.

사회주의자가 진보·좌파 진영의 단결에 기여할 길이 있다. 부르주아 정치인 간의 선거 결과에 목매지 말고 새 정부 하에서도 결국 싸워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불확실성이 커도 분명한 점은, 누가 당선되든 그 정부는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당선되든 노동계급 사람들은 시차는 있겠지만 저항에 나설 것이다. 조직과 의식이 촛불운동으로 다소 강화됐을 것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크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 해도 그 정부는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한국인 다수의 평화 염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결국 후자를 배신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고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긍정적 사고' 없는 희망을 갖고 있다. 노동계급이 중간계급의 지지(소위 '사회적 연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항에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민중주의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흔히 던진다: 도대체 근대 노동계급이 아동기를 갖 지나고부터 지난 2세기 동안 혁명에 성공한 적이 있는가? 러시아 혁명도 결국 패배하지 않았나. 천박한 경험론의 결과론적 논증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아직 미성숙한 나머지, 1848년 혁명에 실패한 이후 노동계급은 고립됐다는 따위의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잠재력을 논증하는 조사·연구에 착수했고, 그 결과가 <자본론>이다.(올해는 그 출판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자가 또 하나의 현대판 <자본론>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여전히 그 저작으로 노동계급의 단독 저항 성공 불가능 주장을 반격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론>의 정치학이다. 마침 그 저작의 정치적 결론은 노동자 혁명을 뜻하는 말로 내려지고 있다.

다른 많은 곳에서 마르크스는 민중의 자력해방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에 대해 얘기했다.

노동계급은 단독으로 싸울 수 있고,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3면에서 이어짐

주류 야당의 선거주의에 말려들면 안 된다

지배계급의 일부(아마 다수)는 박근혜 일당을 빨리 정리해 체제의 안정을 되찾고 싶어 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익의 공세를 활용해 퇴진 운동을 서서히 잠재우는 데에는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그러니 연일 우파 언론들을 동원해서 운동의 대의를 깎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주류 정당들에게 현재 결과의 무조건적 승복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 비춰 볼 때, 주류 야당들과 그 주요 대선 후보들(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등)이 중도보수층을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대연정이나 떠들고, 범여권 정당들과 탄핵 결정 승복을 합의한 것은 역겨운 배신적인 야합인 것이다.

탄핵 결정에 여론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압력의 본질적 내용은 '불복 가능성'이다. 따라서 탄핵 찬반 모두 결과에 승복하자고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 찬성 쪽에 해로운 짓이다.

주류 4당의 승복 합의가 난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가 사실로 이제 양쪽 집회도 여야 합의를 따라 현재 결과 승복을 약속하라고 공격한 것을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웁게도 퇴진행동은 이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더 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복 합의를 비판한 것도 잘한 일이다.

주류 야당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백남기 특검, 언론 장악 방지법 등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을 단 하나도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적극 동의했던 선거권 18세 하향도 유예했다. 박근혜 적폐 유지에 앞장서는 황교안을 공격하기는커녕, 국정교과서 채택이 부진하자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을 공격하는 일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적폐 청산

퇴진 운동 초기부터 이 운동의 잠재적 급진성을 경계하기에 급급했던 중도진보계 언론들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등의 행보를 감싸기에 바쁜 듯하다. 가령 문재인이 여성 공약을 발표한 포럼을 보도하면서 <한겨레>는 그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동성애 차별 발언 등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쏙 빼놓았다.

주류 야당들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해 초조해진 지배계급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지배계급은 박근혜 일당만을 제거하는 선에서 정치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류 야당들은 집권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보수층 표 얻기에 방해될 정도로 운동이 심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순된 신호를 보내면서 운동을 교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 하는 대중의 염원이 실현되려면 주류 야당의 선거주의에 말려들어서 안 된다. 더 많이 거리로 나와야 하고, 특히 조직 노동계급이 더 많이 참가해 고유의 의제와 투쟁 방식으로 운동을 더 심화시켜야 한다.

운동이 이처럼 깊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류 야당의 우클릭을 볼 때 이 정당들의 주류 후보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금세 지지자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고통전가 공격을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권 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만, 박근혜가 어떻게 물러나느냐도 중요한 이유다.

단지 권력 농단(이익 독차지)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친기업 특권층 우대, 고통전가 정책, 블랙리스트 공작 등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 이는 퇴진 운동이 적폐 청산 등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구조에 맞서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김영익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이 일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틸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었다.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건 단지 남한만의 일이 아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양상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은 즉시 ‘누가 김정남을 죽였는가’로 쏠렸고, 이에 관한 온갖 보도가 쏟아졌다. 온갖 ‘카더라’ 통신이 쏟아졌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입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김정남 피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건 직후부터 북한, 남한, 미국,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이 현지 수사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부검과 시신 인도 여부를 놓고도 각국의 물밑 외교전이 벌어졌다. 수사 결과에 참여한 이해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이는 소동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새로운 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김정은과 김정남의 갈등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힐끗 보여 준다.

김정남, 3대 세습의 걸림돌

그러나 피살 사건의 맥락과 파장에 더 주목해야 한다. 그러려면 물음을 던져 봐야 한다. 1990년대만 해도 서방 세계에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예상돼 온 김정남이 어쩌다 말레이시아에서 홀로 객사하는 신세가 됐나?

김정남과 김정은의 갈등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복동생한테 밀려난 김정남은 해외(주로 중국)에 거처를 마련해 살아야 했다.

물론 김일성 일가 중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이 평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김정남만의 사례는 아니다. 1975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는 조카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하자 자강도 산골로 보내져, 18년 동안 거기서 지내야 했다.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도 30년 넘게 유럽에 머물며 평양과 거리를 뒀다.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할 것을 내세워 혈통 세습을 정당화하다 보니, 바로 가족이 독재자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력에서 밀려난 다른 가족과 달리, 김정남은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권력을 물려받은 2010~11년 김정남은 주로 일본 언론과 접촉해 3대 세습을 공개 비판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에선가 그는 동생의 권력 승계를 못마땅해 했고 이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남은 2011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조차 세습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특징적인 내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고미 요지, 중앙m&b.)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이때 김정은한테는 이복형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좁히는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2011년 서른도 안 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2013년 북한은 당 강령의 핵심 부분인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개정하며 이 점을 명문화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외부에서 3대 세습에 흠집을 낸 “백두혈통”(심지어 김정일의 장남)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2011년 이후 김정남이 침묵을 유지했어도 말이다. 게다가 김정남은 2013년 김정은이 처형한 장성택과도 돈독한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김정남의 갈등을 두고 “왕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왕자의 난”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왕자들의 권력 다툼과 똑같다고 말이다. 즉, 남한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퇴보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개량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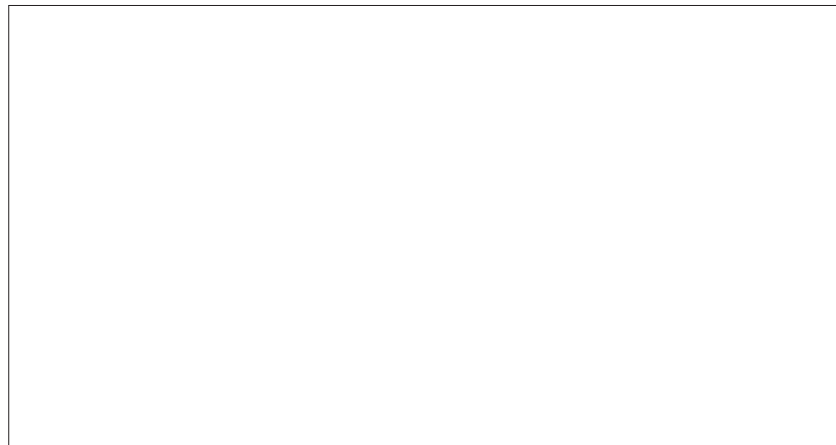
런 주장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한다. 북한은 1950~60년대 공업 성장에서 남한을 앞지른 바 있는 중간 규모의 공업국이다.

이런 엄밀한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 사회 변혁에 대한 전략적 함의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북한 사회를 “왕조”라고 규정하면 그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박정희 독재·유신체제 하의 한국 사회를 왕조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 큼이나 비역사적(초역사적)이다.

특수성

물론 북한의 3대 세습, ‘왕자’들의 갈등은 마치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성을 예외성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1879~1940)가 《연속혁명》 독일어판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국의 특수성들은 세계경제의 운동 과정의 기본 특징들이 일국 내에서 독특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처럼 보이는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이런저런 현상과 제도 등은 물자가 부족하고 해외에 손 벌릴 곳도 없는 낙후하고 빈곤했던 나라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봉착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이 있다.

처음 북한이 권력 세습(김일성→김정일)을 선택한 것도 북한 국가자본주의가 거듭 모순에 봉착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대내외적 문제 때문에 북한에



김정남의 비극은 북한 정권의 궤적과 관련해 봐야 한다.

서는 1950~70년대에 여러 차례 관료 내 분열이 벌어졌다. 특히, 1960년대 경제 침체를 계기로 벌어진 관료 내 도전(소위 ‘갑산파’ 사건)은 김일성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하는 한 계기가 됐다. 자신의 노선을 충실히 계승할 후계자를 세우 당과 국가가 분열하지 않고 안팎의 위기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다음 세습(김정일→김정은)은 그때보다 훨씬 더 취약한 조건에서 이뤄졌다. 김정남도 개인적으로 3대 세습을 반대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내부적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내부 안정을 위해 3대 세습이란 이상한 권력 승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 북한의 내부 불안정은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주변 국가도 북한이 불안정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째 누적된 경제 위기에 짓눌려 있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라는, 북한 관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대외 환경에도 대처해야 한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김정남이 말한 3대 세습의 ‘내부적 요

인’일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김정은 후계 구도가 안착되지 않으면 자칫 체제 전체가 어찌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김정은으로의 “이상한” 권력 승계,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복형의 존재는 오늘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한 문제의 일면을 보여 준다. 그래서 북한 권력에 배치당한 채 사실상 망명자로 살았던 김정남의 피살은, 오늘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정성을 힐끗 드러내고 있다.

추천 소책자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59쪽, 3,000원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92쪽, 3,500원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난제들

이처럼 김정남의 피살은 북한 통치 권력의 불안정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준다.

김정은은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국 구체적 성과(핵심적으로 경제 회복, 인민 생활수준 향상)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오늘날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증대를 중심으로 그럭저럭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듯하다. 그리고 북한의 건설 붐과 전력 사정의 일부 호전 등을 주목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북한 경제는 성장세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009년 화폐개혁 실패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민중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² 결국 북한은 화폐개혁 책임자 박남기를 처형하는 등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2013년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내놓은 발표문을 보면, 적어도 그때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의 경제 사업과 인민 생활 향상에 막대한 지장”, “2009년 [화폐 개혁 실패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됨]”.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증가는 북한 지배 관료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 줄 수 있다. 중국 등의 한두 나라와 교역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침체하면 북한 경제도 함께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북한 내에서 위안화 거래가 일반화돼, 위안화 가치 변화가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는 것은 북한 관료들로서는 달가울 리 없고,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증대했으나, 그 혜택이 인민 대중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건 아니다.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교역 과정에서 국가 관료와 결탁해 돈을 번 소수 사람들(소위 ‘돈주’)이 부분적 시장화 조치들을 계기로 북한 국내의 각종 사

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시장화 조치는 인민 대중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예컨대 “돈주”와 무역회사의 창궐, 사유화의 확대 등으로 각종 운임이 급상승하고 있다. 2년 전 청진·무산 간 버스요금은 8백 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 원으로 올랐고 청진·김책 간 버스요금은 10배 인상됐다. 북한 주민들은 전기도 소매로 구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³

자력갱생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제재 강화는 북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악재들이다. 북한이 최근 ‘자강력 제일주의’처럼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자’는 자력갱생(즉, 주체)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전히 핵심 경제 부문들의 회복이 더디다고 풀이될 만한 대목이다.

경제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국제 금융 기구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치하에서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일본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려 했으나 핵 문제 때문에 이내 협상은 어그러졌다. 핵심은 북·미 관계를 잘 푸는 것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경제 회복, 그와 관련된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 문제,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북한 관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3년 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줬다. 이처럼 당시 북한 권력 내의 문제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장성택이 도전한 것 외에도 경

제적 혼란의 책임과 대외정책상의 이견까지 처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 지배 관료 내에 균열을 낳았던 것이다. 군부 수뇌부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이 지나치게 자주 교체되는 것도 북한 권부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벌인 일일 것이다. 앞으로 여러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러저러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3대 세습을 강화하고 관료들 내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 지배 관료들 내의 극심한 갈등을 보여 줬다.

‘정권교체’인가, 노동자 혁명인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사실에서 김정남 피살을 두고 북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익은 이번 사건을 인권 문제 등 대북 압박 강화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듯하다. 〈중앙일보〉는 “반인권적 북한 정권의 처리 문제를 주요 국제 안보의제로 올리는 데도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동아일보〉는 “국론분열 같은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고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겨냥한 말이다.

현재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익들은 정치 지형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민주당 등 야당의 ‘안보관’을 공격하고 다시 이 문제를 사드 배치와 연결하고 있다. 혹자가 비꼬았듯이 ‘기—승—

전—사드’다.

우익은 북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즉 북한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를 아래로부터의 대중 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국가 기구들을 민주적으로(노동자 평의회 형태로) 세울 필요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익들은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세력이 북한 정권을 교체해 북한 ‘민중’을 ‘해방’하자고 얘기한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이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은 세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가 가한 압력과 북한 관료의 선택이 결합된 결과다. 미국과 한국이 제국주의적 압력을 높인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무엇보다 북한 민중의 아래로부터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민주주의’ 운운하며 군사적 침공이

나 제재를 가한 이라크, 이란 등지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이다.

우익과 달리, 노동자연대 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 노동계급도, 여느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 변혁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품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남한 노동계급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배우고 입증했듯이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진보가 아니고 고통일 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위기는 북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표방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창출해야 한다.

※ 이 글은 2월 15일에 쓴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주석]

- 1 1974년 김정일이 발표한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의 한 대목.
- 2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창비, 2014.
- 3 김어진,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시장화 조치들에 대한 시론적 단상’,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여성해방 하루학교



일시 3월 5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50분

장소 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강당
(지하철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에서 250m)

주최 노동자연대

참가비 15,000원
(대학생 할인가 10,000원 / 청소년 할인가 7,000원)

문의 02-2271-2395 / 010-4909-2026 (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www.workerssolidarity.org

오전 10:00 ~ 11:30
러시아 혁명 100년
러시아 혁명과 여성해방
연사: 정진희 '노동자연대' 활동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역은이

오전 11:50 ~ 오후 1:20
오늘날 여성 차별의 현실과 쟁점
연사: 이현주 '노동자 연대' 기자

오후 2:30 ~ 4:00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연사: 정진희 '노동자연대' 활동가,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오후 4:20 ~ 5:50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연사: 최미진 '노동자연대' 활동가,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정권 교체”를 바란다. 그러나 단지 정권 담당자들의 얼굴만 바뀌길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1당이자 대선 지지를 1위 후보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분노와 변화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촛불 등장 이후 상승세인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정작 광장에서는 민주당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다.

가령 현재 지지율 1위인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은 ‘현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승복하겠다’며 촛불 민심의 뒤통수를 쳤다. 그 뒤를 쫓는 안희정은 “집권해도 의석이 과반수가 안 되니 뭐라도 하려면 새누리당 출신 세력과도 협력하는 대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심력이 약화된 중도 보수층의 표를 얻어 보겠답시고 촛불을 배신하는 행태들이다.

그러나 같은 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들의 우클릭 노선을 비판한다. “범피 세력”과 손잡는 “대연정은 배신”이라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더 크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 당의 주류와 다르게 맨 처음부터 퇴진 운동을 지지하고 ‘박근혜 퇴진·구속’을 주장해 온 그의 언행은 진보 염원 대중의 정서에 응답해 왔다.

최근에는 한상균 위원장을 당선 즉시 사면하겠다고 했다. 노동운동의 상징이자 대표적 적폐인 한상균 위원장 구속 문제를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 시장은 2월 11일 광화문 집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합동 버스킹을 했는데, 공연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가득 찰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이날 청중은 심 대표와 이 시장이 조기 탄핵, 이재용 구속 등을 말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등 속 시원한 얘기를 할 때마다 환호했다.

이처럼, 지배계급에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주류, 기득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의 언행이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노동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 같다.

한편 공공 투자에 대한 그의 강조도 청년 세대에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지원, 무상 교복 지원 등을 실행했다. 물론 액수나 규모 면에서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반대와 방해를 뚫고 공약한 복지를 실행하자 서민층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놓고 “적자 날게 뻔한 사업을 왜 하느냐”는 비판을 받았을 때 이 시장은 이렇게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 지음, 메디치미디어,
184쪽, 8,000원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지음, 위즈덤하우스,
228쪽, 14,000원

“50만 명 이상이 1년 내내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에서 30억 적자는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신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대한민국의 성공한 샌더스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시민운동을 하다가 공식 정치에 뛰어든 것 등 샌더스와 “경험의 동질성”을 부각시켰다. 이 시장은 10대 시절을 공장 노동자로 살았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갔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켜 인권변호사로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공식 정치에 입문했다.

샌더스는 미국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공식 정치와 거리를 뒀 온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다른 한편, 이재명 시장은 스스로 “진보적 요소가 있지만, 헌법과 법질서,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진보적 자유주의자처럼 말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시장이 샌더스가 미국 정치에서 한 ‘구실’을 하겠다며 오



1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범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한 이재명 성남시장.

른쪽으로 기울어진 한국 공식 정치에서 급진적 주장을 펴는 것은 광범한 진보 염원 대중에게 공명을 얻고 있다.

운동의 열망

그는 “적폐 청산”을 다른 민주당 경쟁 후보들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그 자신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이재명, 메디치, 2017)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대선 공약의 열개를 정리한 이 책에서 이 시장은 “소수 기득권 지배를 끝장” 낼 “정치혁명”을 강조한다. 이 책의 첫 장 제목이 “역사 청산”이다.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은 “청산했어야 할 구악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친일·독재·부패 세력”, “기득권 세력”을 이 기회에 청산하자고 한다.

복지 자원 마련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처럼 “쓸데없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여 국가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재벌 증세와 초고소득자 증세”,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법인세 8퍼센트 인상”과 “서민 증세인 담뭍세 인상

철회”도 말한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공공의료 확충, 노인 기초연금 인상, 고교무상교육” 등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이재명표 뉴딜 정책”이다.

이 시장은 2월 14일 전국금융산업 노조 위원장 취임 축하에서, 박근혜가 “성과연봉제”로 노동계급의 “조직된 부문을 탄압하며” 전체 노동자의 “하향 평준화”를 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혀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일 외빈 자격으로 같이 참석해 무미건조한 축하를 한 안희정과 크게 대조됐다.

그런데 이 시장은 당선 후 정권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의 후보이므로 민주당의 자원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코 그가 말한 여러 가지 “청산”을 할 주체가 못 된다. 민주당도 적폐 창조 세력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김대중·노무현 집권 시절을 겪으며 더 분명해졌다. 문재인은 광주 학살 주범인 전두환과 정호용 등을

옹호한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을 영입하려고 했고, 최근에는 한미FTA 협상 주도자인 김현종을 영입했다.

따라서 이 시장이 민주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면 그 자신이 내세운 강점과 의지는 급세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별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아쉽다. 물론 노무현이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모순들에 직면했을 때 그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직은 짐치기 힘들다.

그럼에도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정서와 염원을 공식 정치 안에서 적극 대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시장이 현재의 태도를 고수하고 운동의 확대에 기여해 지지층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란다.

운동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도약도 가능했다. 좌파에게 중요한 것은 이재명 시장을 그저 폭로만 할 게 아니라 그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도 필요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삼가지 않는 것이다.

신명화·박한솔

독자 편지 |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나는 지난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구치소 내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조사실 및 징벌실에 수용되고 고문성 계구 착용을 당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항의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영터리 재판이었음에도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도소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수용실에 수용자를 가두는 것이 위법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내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여름 교도소에서 질서 위반

혐의로 조사 수용된 수용자가 혹서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돈 없고 ‘뺨’ 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부패한 기업주나 정치인 같은 ‘범털’과 ‘개털’이라 불리우는 일반 재소자들의 처우가 천지차이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소자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던 나는 죄가 없다.

조익진



사진 출처 | InsurectNews/트위터

프랑스 청년들의 반란은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의 일부이다.

계속되는 프랑스 빈민 청년들의 반란

뿌리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다

2월 초부터 파리 외곽 빈민 거주지에서 청년들이 일으킨 반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직접적 발단은 2월 2일 경찰이 한 20대 흑인 청년을 구금한 상태에서 항문에 곤봉을 쏘서 넣은 사건이다. 해당 청년은 장기가 손상돼 지금도 입원 중이다.

경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하고, TV에 출연한 한 경찰 간부는 해당 경찰관들의 인종차별적 언사가 “대체로 적합한 수위였다”고 말해서 분노를 더 키웠다.

경악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한 이 사건은 프랑스가 인종차별이 뿌리 깊은 사회라는 것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흑인, 아랍계, 로마인 [집시] 등은 특하면 경찰 폭력과 박해에 시달리고, 평균 한 달에 한 명꼴로 죽임을 당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북아프리카인은 백인보다 6~8배나 더 많이 불심검문을 받는다.

역대 프랑스 정부는 이런 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체계적으로 인종차별을 부추겨 왔다. 다가오는 4월 대선에서 경찰의 절반 이상이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FN)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프랑스 경찰은 지독하게 인종차별적인 집단이다.

프랑스 지배자들에게 경찰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해에도 사회당 정부는 경찰 폭력에 의존해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였다. 반면, 경찰 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과거 프랑스의 중동·북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이주민의 가난한 후손들이라서 지배자들의 안중에 들지 못한다.

2015년 11월 파리 공격 이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경찰에 더 많은 권

한을 부여하자 경찰 폭력은 한층 더 늘었고,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지금은 경찰을 의심할 때가 아니다’ 하며 일축했다.

프랑스의 빈민 청년들은 1980년대 초 이래 거듭 저항에 나섰다. 비록 그 형태는 조직된 운동과 산발적 반란을 오갔지만 말이다. 1983년에는 “우리를 토끼인 양 쏘 죽이지 말라”고 요구하며 10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 2005년에는 파리 교외 빈민가에서 흑인 청소년 2명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죽은 것에 항의해서 최대 규모의 반란(‘방리유 반란’)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도 파리 교외에서 한 20대 흑인 청년이 연행 도중 경찰차 안에서 죽자, 미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본 만 시위(#BLMfrance)가 벌어졌다.

이번 빈민 청년들의 반란은 프랑스 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불행히도 프랑스의 많은 좌파들은 이슬람을 반동적으로 보며, ‘프랑스 국가가 이에 맞선다’는 지배자들의 거짓말에 휘둘려 빈민 청년들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했다. 알제리 등 대표적 식민지의 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무슬림인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인종차별에 대한 타협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앞장서서 무슬림의 hijab 착용을 금지시킬 수 있었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도 사회당 정부는 법원 판결까지 거스르며 부르키니(부르크+비키니) 착용을 금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조치를 지지

했고, 난민촌도 대대적으로 파괴했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은 한편으로 자신이 이주민과 무슬림을 더 잘 괴롭힐 수 있음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양당이 긴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다. 대표 마린 르펜은 현재 25퍼센트가량의 지지율을 보이며 4월 대선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그러나 결선에서는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이번에도 르펜은 “안전은 모든 프랑스인에게 보장돼야 할 근본적 권리”라고 말하며 경찰이 반란에 나선 빈민 청년들에게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흑인·아랍계 주민들은 이미 프랑스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좌파적 단체들이 빈민 청년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시위를 준비 중이다. 2월 18일에는 노동총동맹(CGT)과 교사노조(FSU), 프랑스대학생연합(UNEF), ‘SOS 인종차별’ 등이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과 맞물리는 3월 19일에는 경찰 폭력 희생자 유가족들과 반자본주의신당(NPA) 등이 ‘정의와 존엄을 위한 행진’을 벌일 것이다.

이런 행동이 더 많아져야 하고, 특히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프랑스 좌파 사이에도 크고 작은 형태의 인종차별과 무슬림 배척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혁명적 원칙으로 무장한 좌파만이 빈민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저항과 노동자 운동을 연결시키고, 프랑스에서 기승을 부리는 파시스트 운동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김종환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를 22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같은 당의 문재인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상속증여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말하지만, 법인세는 인상보다는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관련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점에서는 안철수와 충남지사 안희정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문재인과 안희정을 겨냥해 “복지도 확대해야 하고 증세 필요성도 있는데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해 놓은 것을 보면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는 측면이 있다” 하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기업주들과 우익들은 한목소리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박근혜·최순실 부패 사건에서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전경련이 대표적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 의지가 줄어들고 고용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이 감소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

하지만 법인세 인화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늘리며 고용을 증대할지는 미지수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곧장 기업의 이윤이 증대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법인세 인하를 반긴다.

그리고 법인세가 인하되면 인화된 세액만큼 이윤이 증대하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이 생존하거나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그 때 뿐이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들은 인화된 법인세율을 주어진 조건으로 삼아 투자를 결정한다.

또한 기업주들은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보다는 각종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그리고 이월결산금을 반영하지 않은 영업이익의 증감을 투자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법인세율보다는 마르크스주의 용어로 이윤율, 또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을 주요하게 고려한다. 그 때문에 이윤율이 낮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인하는 투자 증가보다는 사내유보금 증대로 나타난다.

이런 점은 실물 경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0년 법인세 인하 이후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법인세

는 44.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지만 그만큼 투자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2001~08년 4.2퍼센트에서 2009~15년에 2.5퍼센트로 오히려 1.7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적 추세라고 할 정도로 각국 지배자들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40퍼센트였던 법인세율을 30퍼센트까지 꾸준히 낮추었지만 일본 경제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는 35퍼센트인 법인세율을 15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런 정책이 고용·투자 증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 과감한 부자 증세

법인세 인하가 기업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 4년(2012~16년) 동안 근로소득세 총액은 58.2퍼센트 증가하고 담뱃세 등 개별소비세도 58퍼센트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고작 13.5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2013년과 2014년에는 법인세가 오히려 줄어든다. 박근혜는 기업주들에게는 덜 걷고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이 쥐어줬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그래서 세원과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것도 기업주들의 주된 법인세 인상 반대 논리다. 그래서 전경련은 법인세가 3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하락하는 동안 법인세 총액이 1995년 8.7조 원에서 2015년 45조 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총액 증대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1995년이나 2015년 모두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은 대체로 2퍼센트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를 8퍼센트 인상하더라도 2.6조 원 정도의 세수 증대로는 주거, 노인, 여성, 청소년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익의 주장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필요한 복지 예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법인세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더 과감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

토마 피케티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후 30여년 동안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복지에 사용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자와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이를 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정구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임금 삭감 없이

김종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청년실업: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공저자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실업 통계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구직 활동을 4주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불완전 취업자'나 취업 준비 중인 사람 등까지 포함하면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퍼센트가 된다(통계청, <고용보조지표3>). 하지만 이조차도 과소평가된 수치라는 주장이 많다. 많은 연구자들은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적어도 30퍼센트 대라고 추정한다.

우익들은 '귀족 노동자가 일자리를 독점해서' 청년실업이 생긴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의 고공행진은 전체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의 일부이다. 인력을 줄이기 원하는 자본가들이 우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유독 높은 것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청년 실업률이 유달리 높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저질·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력은 때로는 '낙인'이 돼 더 편찮은 조건으로 취업하기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에 상당히 긴 시간을 쏟아붓는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체 실업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왜 최근 몇 년 동안 실업 문제는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경쟁적 축적에 기반한 체제이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노동비용을 절감하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기계와 자동화로 노동자들을 대체한다. 마르크스는 이런 과정을 '자본 구성의 고도화'로 인한 '산업예비군'의 증가라고 불렀다.

다수의 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잉여 가치)을 얻으려 경쟁하는 자본주의에서 실업 발생은 예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경기가 호황이면 전체 생산 자체가 확장하므로 생산구조가 바뀌더라도 실업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2008년 위기 이래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불황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설비 가동률도 낮아져 일자리가 감소한다.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 청년들의 '눈높이'와 '귀족노동자' 탓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 (노랑진 고시 학원 계단을 바삐 오르는 한 청년.)

으로 기존 취업자들마저 실업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청년 창업이 대안이라고?

그런데 주요 대선 주자 중 상당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시장'에 맡기려 한다.

바른정당 유승민은 '돌발노동' 제한, 초과근로시간 제한 등을 얘기하고, 재벌이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대안은 창업 전선에 뛰어들라는 말이었다. 그는 "노랑진 고시원이 모두 스타트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원천은 창업밖에 없"으며,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대담하게 우클릭을 하고 있는 안희정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제인을 공격하면서, "세금 떨어지면 그 일자리도 없어진다", "시장과 기업의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투자를 원활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늘도록" 하는 법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옹호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별다른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국제적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조건의 후퇴와 불평등의 심화를 낳는다는 점은 이제 거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안희정은 반동적이게도 비정규직법을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둔갑시키면서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도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어차피 기존 일자리 다수가 사라질 것처럼 말한다. 따라서 "청년 창업 열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지적했듯이, 실업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 엘리트들이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기술 발전과 같은 비인격적 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만, 사실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AI·로봇공학의 발달을 과장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요구를 내팽개치기 위한 정치인들의 미사여구일 뿐이란 것이다.

공공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보수 성향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

책은 잘해 봐야 무책임하고 대개는 해악적이다. 게다가 공상적이기까지 한데, 세계적으로 낮은 이윤율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신생 자본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과 달리 청년 실업은 시장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OECD 평균인 21.3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는 7.6퍼센트밖에 안 된다. 부족한 여러 사회서비스 인력만 충원해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갑절로 늘릴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은 연평균 2천 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법정 연장노동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백45만 명이며,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만 1백13만 명이나 된다. 초과노동 포함 주 48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자리를 1백1만 개 이상 늘릴 수 있다.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 총액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 삭감되면 임금 부족을 메우려고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이나 '투 잡'을 선택하는 쪽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 11면으로 이어짐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책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연사: 김종현
(대학생, 《청년실업: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공저자)

한계 토론해 봐요!

청년실업 역대 최대!
도대체 왜?
해결책은 뭐야?

2월 21일 (화)
저녁 6시 30분

연세대학교 과학원 S118B
010 5443 2395 (문자 환영)

참가비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지난 2월 9일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급 차별 시정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차등적 급여 지급으로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 교육 폐해를 낳을 뿐인 성과상여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기도 하다.

2011년 5월 기간제 교사 4명이 성과상여급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1심(2012년 6월)과 2심(2013년 4월)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승소에 힘입어 기간제 교사의 집단 소송(약 3천 명)도 2012년 10월에 시작됐다.

이렇게 기간제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3년부터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급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 호봉이 정규직 교원과 달라 여전히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은 성과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기간제 교사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정말이지 이런 차별을 받으려고 기간제 교사가 됐나 자괴감이 든다.

판결의 부당성

대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판결했다. 세 가지 모두 부당하다.

첫째, 대법원은 성과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무원은 '호봉 등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교원만을 의미하므로 14호봉으로 제한된 봉급을 받는 기간제 교원은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기간제 교원도 경력에 따라 호봉이 오르고 있다. 기간제 교원의 봉급이 14호봉으로 제한된 것은 2009년까지다.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이니 계약제 교원의 운영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 후로는 기간제 교원도 '호봉 등급'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다 성과상여급을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차별이다.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법의 공무원보수 규정에서 아직도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제한하고 있다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 대법원은 '성과상여급이 전년도 근무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업무 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로 단기 채용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퇴직하므로,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과상여급이 교사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기간제 교사가 1년 일하고 만다고 전제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경력이 10년 넘는 기간제 교사들도 상당히 많다. 기간제 교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맞지만, 한 학교에서의 근무도 1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교사의 불충분한 임용 등으로 한 학교에서 7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기간제 교사 상당수는 한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 근무한다. 그러나 근무하는 학교



죽음 앞에서도 차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지혜, 김초원 두 기간제 교사는 여태껏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 바뀐다는 점도 성과상여급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규 교사도 한 학교에서 4~5년 근무하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데, 학교가 바뀌는 정교사에게도 당연히 성과상여급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셋째,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 35조*에서 '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교원의 성과상여급 보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35조는 기간제 교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왜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지위를 달리 보는 근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대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다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등을 똑같이 요구 받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간제 교원이 비록 기간 제한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도 있다.

차별에 반대한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에서 정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한다. 교과 수업, 담임 업무, 일반 행정업무까지. 정교사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 정교사를 충분히 임용하지 않아서 정교사가 해야 할 업무를 기간제 교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한다. 많은 기간제 교사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지 않고 야근을 하며 주 40시간 넘게 일하기도 한다.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이 기간제 교사들의 업무가 되는 경우도 많다.

현실이 이런데도, 기간제 교원의 최고 등급 성과상여급은 정교사의 최하 등급 성과상여급보다 적다. 기간제 교원들이 성과상여급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차별은 여전히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차별 관행에도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원이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원이며 그에 따라 차별적이지만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고 호봉 등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법규정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한 부당한 판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교육공무원법의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장 보수 (개정 2011.9.30.)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 10면에서 이어짐

문재인과 이재명

이와 유사한 요구를 내놓은 주요 대선 후보로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자신의 일자리 정책이 "비상 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주 52시간을 상한선으로 삼고, 연차휴가를 다 쓰게 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데, 임금 보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로, 그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면서 그 재원은 노동자도 분담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게다가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은 이조차도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비판하면서 시장의 구실을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 역시 자본가들을 자신의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개혁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적폐 청산 공정 국가'를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는 나은 점도 있다. 그는 노동운동이 지난 몇 년간 요구해 온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은 노동계급 청년들의 고통을 미약하게나마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재원에 대해 합구하는 문재인에 견줘, 법인세 인상과 '슈퍼리치 증세'를 주장하는 것

도 분명히 나은 측면이다. 그럼에도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문재인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노동 프렌들리'를 천명한 정의당 심상정은 아직 일자리 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많지 않다. 다만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주류 야당 정당들보다 훨씬 나아졌음을 고려할 때, 그의 일자리 공약이 여야 주류 정당들보다 훨씬 담대하고 효과

적인 정책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덧붙여, 아무리 대단한 일자리 정책들이 약속된다고 한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비용과 고통을 전가하려고 버리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없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성취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자 투쟁의 전진이다.

기업 분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라

박설

현대중공업 사측이 2월 27일 현대중공업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4시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 4시간, 23~24일과 27일 8시간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총회장 봉쇄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의 전면 파업은 2014년 민주파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제시된 기업 분할 안은 회사를 갈기갈기 찢개는 전면적 구조개편 방안으로, 가뜰이나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구조조정 공격으로 고통 받아 온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불만을 사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조선·해양·엔진(현대중공업), 전기전자(현대일렉트릭), 건설기계(현대건설기계), 로봇(현대로보틱스) 등 사업분야별로 4개로 찢개고, 그린에너지와 서비스 분야도 각각 현대중공업과 현대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4월 1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엄습하는 불안감

기업 분할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말 제도화된 것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규모 축소), 수익성 제고와 착취 강화, 최대 주주의 기업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현대중공업 분할 계획은 조선업 위기 속에 추진된 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애초 자구안에서는 기업 분할이 최후의 보루로 다뤄졌었는데 사측이 "선제적"으로 시행에 옮기로 한 것이다.

이번 분할 계획은 지난해부터 야금 야금 시도된 분사화보다 전면적이고, 기업의 규모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사측은 설비지원부서를 분사화해 현대중공업모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전직 거부자 3백여 명을 제외한 7백여 명이 현대중공업에서 퇴사해 이곳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 기업은 별도의 자산이 없는 자회사로, 원청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하청업체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반면 이번에 분할되는 전기전자(현



"정몽준의 막가파식 구조조정 끝장내자" 2월 15일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

대일렉트릭), 건설기계(현대건설기계), 로봇(현대로보틱스) 회사들은 자산 규모가 적게는 1조 6천억 원에서 많게는 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기업이다. 자산 규모로 치면 쌍용자동차만 한 회사 두 개,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중형조선소 한 개가 신설되는 것이다. 인력 규모도 1천 수백 명에서 2천~3천 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이런 분할이 사업부문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고용과 노동조건도 "1백 퍼센트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금세 깨질 거짓 약속일 공산이 크다. 당장 입단협 교섭에서 '임금 20퍼센트를 반납해야만 올해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사측이 노동자들을 여러 회사들로 갈기갈기 찢어 단결력을 저해한 뒤에 도리어 공격을 멈출 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무엇보다 기업 분할은 그 목적상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조처다. 각 기업들이 사업부문별로 별도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거나 사업부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력·인건비·업무실적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임금·노동조

건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더구나 그동안 매각설이 나돌던 건설기계 사업 부문은 고용 불안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기업 분할은 매각에도 용이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주력 사업 부문인 조선·해양의 노동자들도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의 급격한 수주 축소와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과 비조선 부문에서 얻은 수익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런데 기업 분할로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다면,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나 임금·조건 하락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이미 사측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올해 6월 군산공장을 폐쇄할 계획도 내놔다. 군산공장 폐쇄를 비롯해 분할 기업들의 본사 이전 등으로 일부 업무가 타지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노동자들에게엔 무시 못할 불안 요소다.

편법적 경영 승계

현대중공업 사측이 이처럼 전격적인 기업 분할 방식을 택한 데는 정몽준의 지배력 강화, 아들 정기선으로의 탈법적 경영 승계라는 목적도 크다. 지금껏 정몽준은 현대중공업의 지분 10.15퍼센트를 가지고 순환출자로 그룹사 전체를 지배하며 부와 권력을 누

려 왔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를 물려주려면 현행법상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주들이 그렇듯이(재벌 총수는 물론 중소기업주들도), 정몽준은 '기업 분할 → 지주회사 전환 → 자기 지분의 의결권 확보 → 지분을 확대'라는 편법적 "지주회사 마법"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지배력을 확대해 아들에게 승계하려 한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이번 분할 후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10.15퍼센트에서 43퍼센트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탈법적으로 손쉽게 승계하려면, 필수적으로 기업을 여러 개로 찢개 주식과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할해야 하는 것이다.

"자식에게 권력을 안겨 주려고 우리에게 칼을 겨누냐"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극도의 비효율과 온갖 부패를 일삼으면서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발의된 일명 '이재용법', 즉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은 이 같은 편법적 경영 승계를 규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

의한 법안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자사주가 고스란히 이전되지 못하도록 소각해야 한다거나,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의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 경영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의 우경화 행보를 봤을 때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설사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전에 그것이 통과돼도 현대중공업에까지 효력이 발휘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용진은 한 인터뷰에서 자기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이런 당이 집권하면 재벌에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야당이 집권해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다" 하고 한탄한 바도 있다.

따라서 국회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분할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저항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15일 현대중공업지부의 파업 집회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모여 뜨거운 열기 속에 전면 파업과 총회 저지를 결의했다.[당일 취재기를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 높은 지지로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반갑게도 금속노조 확대간부 1천5백여 명이 참가해 연대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기업들에 구조조정을 재촉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구조조정은 비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더 넓은 연대를 조직하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최근 박근혜 일당과 우익의 공세에 맞서 퇴진운동이 다시금 커지는 상황은 그동안 지역에서 촛불을 들어 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도 반가운 일일 것이다. 역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고 연대가 확대된다면, 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적폐청산을 위한 광장의 시위에도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